

의안번호	2205665
의 퇴 인	전재수의원
회 답 일	2025. 1.10.
추 계 번호	24D517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등의 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2,500만원(연평균 2,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서면실태조사(안 제39조)	25	25	25	25	25	125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9조 (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의 분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함	의무규정
2	안 제57조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의 분야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등은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9조 (서면실태조사)	○	
2	안 제57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교육 등)	—	미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의 분야에서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교육기관등에 위탁하고, 교육기관등은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예산으로 소비자권익증진지원(1441-610) 세부사업 중 소비자교육 실행 내역사업 ¹⁾ 에 402백만원(2024년)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안 제57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등의 분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당 거래 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1) 피해구제 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소비자 주권을 실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 중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 매년 2,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 중 전자상거래등 분야와 유사한 사례인 가맹분야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인 2,500만원²⁾과 동일하게 매년 2,5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서면실태조사	25	25	25	25	25	1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assembly.go.kr

2)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편성되어 왔음. 2023년부터는 실태조사 예산을 각각 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지적에 따라 대면조사 비용을 각각 5,000만원씩 증액한 결과임